



# 다가오는 농업정세와 풀어야할 과제



## 칸쿤 협상 결렬, 불투명한 WTO 및 쌀개협상 전망

“지난 해 칸쿤 5차 각료회의 이후 참여화 되고 있는 세계화 물결은 농업개방압력과 국내농업 축소를 가속시키고 있고 400만 농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화 되어가고 있다.” 현재의 국내농업 정세의 한 단면이다.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강대국들은 “무역 완전자유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제 농업협상’을 끌고 나가고 있고 농업 개방압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반면, 국내농업상황을 보면 농업완전개방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수출강대국에 맞선 공세적인 대응이 아닌 포장된 국제협상테이블에서 조차 미약한 협상력과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비할 수 없는 경쟁력’을 운운하며 국내농업의 축소를 자초하고 있다.

즉, 향후 세계농업과 국내농업의 흐름과 문제의 본질은 WTO 협상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발전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것을 막기 위해 선진국이 ‘사다리를 차 버리는’ 수단이다!

장하준 영국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선진국들은 WTO 및 FTAA 교섭을 통해 자국이 경제발전 당시 사용했던 동일한 정책(보조금 지원, 자국산업 보호, 지적재산권 무시 등)을 개발도상국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 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전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결렬됐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농업분야 각료선언문 초안은 △관세상한 설정 △5%이하 저관세 적용 △보조금 대폭 삭

감 등 수출국에 유리한 내용을 담자 향후 이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농업은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고 말 것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관세상한선 설정을 막지 못한데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가 90%를 초과하는 품목이 141개이고 이 가운데 120%를 넘는 품목이 138개인데, 이들 대부분이 주요 품목이다. 만일 관세상한을 25%로 해서 스위스공식이 채택된다면 우리나라의 관세 감축률은 80%를 넘는다. 즉,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63.8%에서 12.5%로 낮아져 UR방식보다 3배 이상 더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관세감축률은 62%에 달한다. 결국 관세상한이 설정된다면 우리 농업은 붕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마지막 시한인 WTO DDA협상의 타결전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칸쿰각료회의에서 기존의 농산물수출국-수입국간 대결 구도를 대신한 농산물 수출선진국-개도국간 대립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더욱 타결점을 맞추기 어려워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국제정세로 ▲5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25개국으로 확대 ▲10월 말 유럽연합 위원의 임기만료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2005년 수퍼차이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의 임기만료 등이 WTO입장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2004년 쌀 재협상에서의 관세화 유예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2004년 재협상을 하는 쌀의 경우, 일반품목처럼 환산하면 관세가 400% 내외이므로 쌀이 관세화 된다면 그 피해를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농경연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DDA 협상에서 선진국 개방 조건을 적용 받고 쌀도 150%의 관세상한이 붙을 경우 지난해 7조2천270억원이었던 쌀 총소득은 2010년 2조760억원으로 71.3%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선진국 조건을 적용 받더라도 쌀이 비교역적관심사항(NTC) 품목으로 인정돼 상대적으로 고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2010년 쌀 총소득은 5조14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개도국 조건에 쌀이 특별품목(SP)으로 인정되면 2010년 쌀 총소득은 5조6천290억원, 농업총소득은 14조5천556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개도국 조건이더라도 쌀에 200%의 관세상한이 붙으면 쌀 총소득은 4조2천320억원, 농업총소득은 13조3천170억원으로 줄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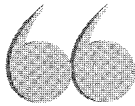
그러나, 개도국 우대와 관련해서 특별품목(SP)을 인정한다해도 나머지 품목은 개도국도 UR방식 이외에 스위스 공식으로 관세를 감축토록 하고 있는 것도 불리한 점이다. 국내보조에서도 품목별 보조 상한을 도입하도록 해 쌀수매 보조금이 대부분인 수매제도 등 우리나라의 보조금 정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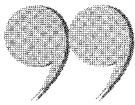
준으로 양허하고 있는 감축대상보조금의 91.3%인 1조3598억원이 쌀보조금 이어서 쌀에 보조상한이 설정된다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내년 쌀 재협상의 향방은 어떠한가? 현재의 상태라면, 내년 쌀재협상은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듯 하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논의와 논쟁을 거쳐온 쌀개방 문제는 국제협상의 향방과 정부의 꺾대 없는 정책의지로 인해 이제는 원점이 아닌 후퇴하는 수준까지 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면서 여전히 '관세화'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관세화 유예로 협상이 타결되면 누구나 슈퍼마켓에서 값싼 저관세 수입쌀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럴 바에는 수입쌀에 고관세를 붙여 국내 판매가격을 비싸게 하는 관세화를 택하는 편이 농업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보여지듯 식량자급률을 비롯한 통일이후 주곡생산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퇴출식 규모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지난 칸쿤 회의 결렬 이후

쌀 재협상을 연계한 언급을 삼가해 오다가 올해 들어 조기 협상전략 수립을 들고 나왔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협상과 쌀관세화 양자협상의 과정과 결과는 서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며 바꾸어 얘기하면, 내년에 홍콩에서 열릴 DDA 6차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쌀 재협상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WTO협상은 선진-후진국간 남북대립 구도의 충돌과 칸쿤협상 실패로 다자주의의 원칙과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향후 어떤 변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특히, 내년 4월, 5월에는 유럽연합(EU)의 내부 사정이 복잡한데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어 협상이 추진력을 받을지도 의문이다. 어쨌든 지난 칸쿤협상 결렬로 DDA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만일 WTO가 정한 시한인 2004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게 될 경우 각 국은 각자가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UR) 이행계획서 시한이 종료된 시점에서 계속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선진국은 2000년, 개도국은 2004년의 관세와 보조금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 즉, 국내 농업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요구하는 DDA가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협상주체인 정부가 좀더 확실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지 않고, 객관적 여건변화에 따른 수동적인 대응에만 머무른다면 향후 DDA 농업협상은 난망적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DDA협상과 쌀재협상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쌀 재협상은 곧 '쌀관세화유예' 협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현 정부농정이 걸어온 잇길, 그리고 가야할 길

**“농업구조조정과 개방농정확대를 위해 정책을 펴야하는데 농촌을 떠나지 않는 농민들이 많아 못하고 있다”**

위의 '한마디'는 현 정부농정의 방향과 딜레마의 결정판이다. 다시 말해, 완전개방을 맞아 농업을 축소해야 하는데 떠나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농정기조는 개방을 전제로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업, 개방화시대의 농업인 소득안정,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이다. 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정책은 파병문제 경제정책, 정치개혁에서 보여지듯이 농업정책에서도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며 '불가피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규모화, 소수 정예화의 농업구조조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농업통상 문제의 접근 또한 WTO DDA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4년 쌀 재협상의 대응에서 볼 수 있듯 국제적 힘의 논리 앞에 스스로 개방대세를 운운하며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업 포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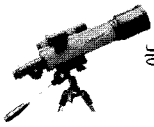
조 투융자정책을 보면, 여전히 정부는 농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다.

농업을 시장경쟁 논리의 잣대로 다루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농촌개발 및 복지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돈만 많이 쏟아부으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농정의 기본이 되어야 할 통일대비 농업기반마련, 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농촌복지 확대, 농가소득 확대, 농가부채 해결, 농협 개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기본이 빠져있는 대책이라면 개방압력이 거세질 내년 국내농업의 흐름은 거침없이 완전개방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거주자 없는 지역, 일할 사람이 없는 산업현장은 아무 쓸데가 없듯 농민 없는 농업·농촌은 있을 수 없다. 바꿔 말해 농업은 농촌의 주력산업이며 이를 이끌어갈 주체가 바로 농민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화자찬식으로 세운 농정의 기획은 먹을 것 없이 소문만 무성한 잔치로 끝날 수 있다.



▲ 지난 1월초 노골적인 개방농정의 뜻을 밝히며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증오했던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 농민과 시민단체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 2004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1?

어디까지나 농업문제의 본질은 WTO협상과 FTA협상 등 강력한 자본의 힘을 지닌 강대국들의 빈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신개념의 침탈로 볼 수 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현정부의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국내농업·농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을 겨울과 다가오는 2004년을 맞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투쟁은 향후 통상정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WTO DDA협상 투쟁과 쌀 재협상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둘째, 400만 농민이 자기의 문제 해결에 중심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

지난 11월 19일 대회를 통해 한사람의 농민의 힘이 결집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겪었다. 이제는 단순히 정부에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적 투쟁에서 벗어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하고 농업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장기적인 농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셋째, WTO DDA협상 및 FTA협상 등 국제협

상 대응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장을 겨울 한칠레 FTA를 비롯한 각종 FTA 협상, 내년에는 WTO 6차 각료회의, 12월까지 쌀 재협상 등이 줄지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국제협상과 흐름은 결코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며 특히, 농업은 희생양이 될 뿐이다. 이러한 희생양의 장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농업사수', '400만 농민생존권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넷째, 전국농민연대 강화를 통해 단결해야 한다.

국내외 농업정세는 400만 농민에게 뭉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지더라도 단단하게 뭉친 진흙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는 농업계 안에서의 보다 굳건한 단결을 해내고, 4700만 국민을 400만 농민 편으로 만들 때 우리농업은 지켜질 것이다.

여섯째, 총선을 통해 농민들의 요구를 표로 보여주어야 한다.

내년 4월은 한마디로 '민의를 대표'를 뽑는 장이 열린다. 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업·농촌회생에 앞장서야 할 우리의 대표들이 과연 임무를 충실히 했는가. 다시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내년 총선은 농업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각 지역 농정공약 토론회 등을 거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고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사람을 뽑아야 한다. **한농연**